

# 종교개혁과 사회과학 : 경제학을 중심으로<sup>1)</sup>

김 태 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 1. 서론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핵심 자체에 던진 도전”이었다.<sup>1)</sup> 개혁이라고 언급하게 된 것은 당대의 로마 교회가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대중적인 사회 개혁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당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공정성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이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공의라면 공정성은 인간 상호관계에 적용된다. 당대 로마 교회는 공정성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성경과 신앙을 이용하였다. 이를테면 사제들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없이 그 해석을 따라오는 것만이 성경에 대한 공정한 관계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곡해한 것이다. ‘권위’를 내세워 신앙을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게임을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라틴어는 물론 독일어에 대한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보였을 수 있다. 마치 한 학생에게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시험범위조차도 모르도록 하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합격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 종교개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은혜를 누리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종교개혁은 합리성을 회복하였다. 당대 로마 교회는 백성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지성소의 율법을 완성하였고 성막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대제사장에게 독점화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로마 교회는 백성들의 이러한 접근성과 판단을 차단하였다. 로마 교회 사제들만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백성들은 복음을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복음에 근거하여 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고 올바른 선택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백성의 신앙심이 자동적으로 깊어지고, 사회적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이끌어 오신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역사적 한 과정이다. 에덴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직전 당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혁되어야 할 본질적인 일

\* 본문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2016년 2월호와 5월호에 게재된 글을 인용, 재구성하고 일부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마이클 리브스(2009), 『꺼지지 않는 불길』, 한글번역(2015), 복있는 사람, p.30.

2) 이승구(2016),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월드뷰』, 2016년 1월호, p.29.

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익숙했던 제도와 행동양식과 열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교회나 개인이 차단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이자 최선의 길이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길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지향하는 바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가? 이를테면 담임 목회자나 당회의 일방적 또는 독단적 판단이 교회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교회 지체들이 공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개혁은 특정 종교 집단의 개혁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대 일상적 삶의 개혁으로 확산되었다. 장기적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의 회복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이 현대 자본주의로 발전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재진행형이라면 현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개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시대정신은 변한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근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공정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합리적)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실천하는 행동을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에서 새롭게 재확인하는 과정은 500년 전의 일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사안이기도 하다.

## 2. 종교개혁과 경제개혁

### (1) 경제개혁의 필요성

세계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대적인 양적완화 조치(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투자나 소비가 기대만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1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원가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잉 공급 상황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심화로 재정 지출을 증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재정 수단을 지속시키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강물의 흐름이나 집안의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물질과 풍로의 구조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 6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의 근원적 흐름은 경제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살펴보기에 묵직하지만 간명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 (2) 종교개혁의 본질

1378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로마 교황에 대적하는 새로운 교황이 즉위하여 교황이 둘이 되자 위클리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이라고 설파했다. 1415년에 처형당한 얀 후스는 교황의 면죄부는 허황된 것이며 당시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실제적 진리로 여겼던 연옥의 존재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교황의 인위적 권위에 맞섰다. 1516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본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여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격문은 구원의 근거는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취리히의 온유한 군인이었던 츠빙글리가 종교개혁가로 변신하여 67개조 격문을 선언한 것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성경이 주인이라는 깨달음 덕분이었다. 1526년 영국의 틴들은 신약성경이 흥미롭게 읽혀질 수 있도록 수려한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였고, 칼뱅은 프랑스와 스위스를 넘나들면서 1536년 <기독교강요>를 집필하여 왜곡된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잡았다.

14-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은 기독교의 근원과 본질의 회복이었다. 신성하게만 여겨졌던 일상화된 권위와 전통과 관행이 오히려 백성들의 속살에 생채기를 냈고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굼은 상처와 질식된 소망을 세상에 드러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상처를 덮어주거나 진통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다.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개혁)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일상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3)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경제적 과제

세계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희망적인 불씨는 남아있는 것일까? 올해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온 세상이 초연결망으로 소통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닌 기존 경제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들 간의 소통과 거래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망을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제시하였다. 2015년 포럼에서 “불확실성”을 핵심 논의 주제로 삼은 것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지만 기대효과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50대 장년층의 일자리 수가 20대 일자리 수를 능가한 것은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단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50대의 재취업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의 상대적 하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나 단순 서비스직의 근로자 부족 현상은 왜곡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반증해 준다.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기존의 왜곡된 권력과 체제와 관행에 의해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단 시되었던 주장이었지만 근원과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였듯이 경제개혁도 경제의 근본에서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개혁은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의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의미로 곡해되고 있다. 먼저 경제 활성화의 논리는 경제성장의 단맛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은 개혁의 가장 설득력있는 결과라고 여긴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 또는 경제성장에는 함정이 있다. 누구나 원하지만 항상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 간 경제성장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경제성장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달콤한 성과이지만 새롭게 뜯어고쳐서 회복해야 할 지향점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이 반드시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식 감각은 가변적이기도 하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헌법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경제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역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주체

는 국가의 공권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은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경제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회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사안이다.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가 경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축약되는 경우도 본질을 흐트리는 주장이다.

#### (4) 경제개혁의 현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역대 정부마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민생경제”와 “경제개혁”이 핵심 슬로건이었다. 내수산업 활성화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불공정한 경제구조 전환과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1,000개 육성 등이 주요 정당들의 주요 공약들이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등 가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건설,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노인 빈곤 해소 등도 나열되었는데 우선순위의 70~80%가 경제적 사안들에 집중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으나 20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왔다. 일부 금융 관련 법안들은 개정이 되었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논란 중에 있기도 하다. 경제 활성화나 개혁의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할 국민들은 거의 없겠지만 추진 방향이나 방식이나 기대하는 관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벤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벤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역대 정부를 통해,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를 통해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구호로 외쳐지고 있는 건가? 만일 진행되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최순실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될 것인가?

경제개혁은 현실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은 역사성을 내포하면서 진행형이다.

#### (5) 경제개혁의 근원으로써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당시 불합리한 로마 교황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모순들을 해결함으로써 체제를 보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역사적 진보를 이루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차단되고 왜곡되고 간과되었던 믿음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연을 되찾으려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은 역사적 발전이거나 진보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이었다.

종교개혁은 일상의 삶을 바꾸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정작 나아갈 수 없도록 뒤틀려진 길을 복구하여 나침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개혁하였다. 경제개혁은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할 수 없도록 드리워진 여건을 뜯어고쳐서 인간 본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의 위력에 젖어있다. 때로는 시장이 만능열쇠처럼 난관을 뚫어준다고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개의 공격을 막아줄 피뢰침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시장’이 길을 이리저리 열어줄 뿐 어느 길이 바르게 나아가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 3. 맺음말

경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창 1:17) 였고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창 1:19) 먹게 되는 원초적 조건에 근거하면, 경제활동의 본질은 노동(일)을 통한 생존이고 번영이다. 물론 여기서 일은 육체적 노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노동(일)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회피하거나 훼손하거나 곡해시켜서는 안 된다. 취사선택이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본질로 이해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본도 기술도 정보도 인공지능도 초연결망도 사람이 일하고 생존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일해야 하고 일한 사람은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대가 이상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거나 수고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권력과 체제와 관행들을 개혁해야 한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려는 사람의 일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땀 흘리기를 꺼려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 경제 구조조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용자이든 근로자이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개인이든 계층이든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는 것은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을 겪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은 에 대해서는 공적 및 사적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득(부)의 재분배는 경제개혁의 결과로써 나타날 것이다. 경제개혁은 인간의 생존이 경제활동으로 소통되어지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